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5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 한전KPS, 국내 기업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위반신고 2,311건, 수사의뢰·과태료 통보 57건
- 사학비리 제보자, 법으로 보호받는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더 간간해진다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한국지역난방공사] 신뢰를 자산으로 지속 성장하는 에너지 기업

3. 청렴 위반 사례

-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 보조금 부정청탁

4. 지식마당

- ISO 31000 (효과적인 Risk 관리를 위한 원칙)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지난 1월 20일 금융당국은 '회계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案)'을 마련·발표했다. 종합대책 최종안은 회사측 면에서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와 감사인 측면에서의 감사품질 제고, 감독당국 측면의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사측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내부 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가 강화되고 회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도 상향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과태료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고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기로 했다.

(감사인 측면) 감사품질 제고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중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입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감독당국 측면)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했다.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했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251>

2. 한전KPS, 국내 기업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한전KPS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공정경쟁에 대한 실천적 국제표준으로, 한전KPS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청렴윤리경영 선도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전KPS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회사의 잠재적인 부패 영향 리스크를 발취하고 국내 우수 선진기업의 부패방지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회사에 최적화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매뉴얼과 절차를 개발했다.

한전KPS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제정 등 국내에서도 부패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전KPS가 국내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전KPS는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 선도기업 구현'을 위한 부패 방지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424000138>

최근 동향 및 소식

3.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 위반 신고 2,311건, 수사의뢰·과태료 통보 57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권익위와 경찰 등 공공기관 23,852곳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2,311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3건 꼴로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을 비롯해 금품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이었다.

기관 유형	조사 대상 기관 수	신고현황				처리현황		
		소계	위반행위 유형별			소계	처리 유형별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외부 강의		수사의뢰	과태료
헌법기관	6	12	-	2	10	1	-	1
중앙 행정기관	51	143	3	57	83	12	2	10
지방 자치단체	260	59	5	50	4	6	1	5
공직 유관단체	1,039	713	25	95	593	16	4	12
학교법인	22,496	1,147	7	71	1,069	5	1	4
감독기관	-	237	95	137	5	17	11	6
계	23,852	2,311	135	412	1,764	57	19	38

부정청탁으로 수사 의뢰된 사례로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인사 등이 있었고,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로는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하다가 신고됐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해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 가족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 제공 등이 있었고,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에게 제공 또는 수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 열쇠 수수 등이 있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41018271983280&type=1>

4. 사학비리 제보자,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가 보호·보상하는 '부패방지법' 규정이 지난 18일부터 발효되면서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학비리 감시 및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시 서울시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mxo=2017042406085974638>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더 깐깐해진 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더욱 깐깐해진다. 과거에 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민 안전관리 및 고용안전, 일자리 창출에 관한 평가는 더욱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2016년 경영실적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전체 대상기관 345개 중 지방공사·공단 141개와 특·광역시 직영기업을 포함하여 156개를 평가한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책임성 강화,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공기업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 발전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고객 및 윤리경영' 지표를 '고객 및 주민참여'와 '윤리경영' 지표로 분리, 신설해 평가비중을 높였다.

<http://www.fnnews.com/news/201704191927002199>

윤리경영 실천 사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뢰를 자산으로 지속성장하는 에너지 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윤리경영 실천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사 윤리목표 달성을 위해 윤리경영의 핵심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 윤리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내외에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윤리 목적	신뢰를 자산으로 지속성장하는 에너지 기업				
핵심 가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청렴성	책임감
실천 인프라	윤리경영 시스템 / 윤리적 기업문화				
	CEO 의지	윤리 규범	윤리 의식 제고	조직·제도 운영	전사적 참여
주요 영역	고객	환경	임직원	지역 사회	기타 이해관계자

1. 동반성장을 위한 공사의 노력

중소기업 대상 열배관공사 직접 발주

공사는 2010년 11월 제도개선을 통해 열배관공사 중소기업 대상 직접 발주를 대폭 확대하였다. 공사의 중소기업 대상 열배관공사 직접 발주 확대 노력은 그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다년간 쌓아온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중·대형 열배관공사 관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중소기업 시공에 따른 공사품질 우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성, 입찰기회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입찰자격의 적정성 문제, 공사 내부 감독의 업무과중 문제 등 극복해야 할 사항이 많았으나, 이러한 문제의 해

결을 위해 공사는 수 차례의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실정 및 의견을 반영하였다. 입찰평가 시 경영상태와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업체 현실을 반영하여 실적 제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입찰 평가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입찰참여 시 중소기업 간 공동도급 의무화,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에 따른 적정지분을 확보를 통해 꾸준히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늘리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분리발주 활성화

공사는 지금까지 대규모 열원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공사관리 문제로 대기업 일괄발주를 시행해왔으나 일부 공사종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분리발주를 시행하였다.

또한, 공사는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였는데, 2011년부터 플랜트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인 창고정비동, 관리동, 조명·통신 등 전기설비의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고, 대구우드칩 전처리설비 공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동형 열원공사 중 전기공사를 각각 분리발주하여 중소기업과 계약한 것이 일례이다.

아울러 공사는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납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분리발주를 추가 시행하여 2011년 5개 품목 28억 원, 2012년 8개 품목 148억 원으로 5배 확대된 금액을 중소기업과 계약하였다. 이로써 전체 중소기업 계약금액 약 15% 증가와 발주자 건설 투자비 약 13% 감소를 달성하게 되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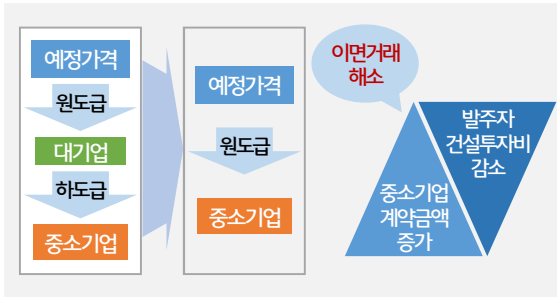
한편, 공사는 2008년부터 3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발주자·대기업(원도급자)·중소기업(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지급 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건 공사에 37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중소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였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공사와 중소기업의 Win-Win 실현

중소기업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입찰기회가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불법·저가 하도급 등 이면거래를 해소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은 하도급계약 시보다 계약금액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제고되었으며, 공사 또한 하도급공사를 최소화하여 건설품질을 확보하고 도급단계 단축으로 건설투자비가 감소되어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중소기업 직접 참여에 따른 효과>



2. 착한탄소 프로젝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탄소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서 2년 연속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산업리더로 선정되는 등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특히, 연간 약 127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발급받고 있다. ‘착한탄소 프로젝트’란, 공사와 같이 탄소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착한탄소기금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자발적인 탄소중립활동으로서 시민, 기업, NGO가 동참하는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이다. 착한탄소기금에 판매된 탄소배출권은 영구 소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되므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배가 된다. 착한탄소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사가 태양광발전 CDM사업으로 확보한 1,859톤의 탄소배출권이 소각되었으며, 판매수익은

환경운동연합의 나무심기 프로그램에 기부되었다. 탄소상쇄를 위한 기부금이 배출권 상쇄에 사용된 후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재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형평적 인재채용의 노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면서도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채용인원을 할당하는 방안으로 채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인사팀은 채용군을 의상자, 사회선행자, 저소득계층, 농어촌출신,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여섯 개의 군으로 나누고, 이후 장기기증자, 의사자의 유족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사회형평적 채용 입사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조직 내 우려가 있었으나, 공사는 조직융합의 목적 및 사회형평적 채용 입사자의 능력을 확신하여 다른 입사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하였다. 5주간의 훈련이 끝난 뒤 나온 결과는 1등을 비롯해 평가 성적 상위 5명 중 4명이 사회형평적 채용 입사자였으며, 사회형평적 채용 입사자와 일반 입사자 간의 점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사회형평적 채용 입사자도 업무에 있어 기존 조직원들과 똑같은 인재임을 증명하고, 공사는 사회형평적 채용 첫해인 2006년 이후 공사의 채용 인원 중 약 30%를 사회형평적 인재로 채용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사례집, 2013

청렴 위반 사례

1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 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다.

시사점 :

- ① 계약 당사자 선정에 관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②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른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③ 해당 사례는 교수 B는 제3자인 건설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④ 계약담당 직원 C는 교수 B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보조금 부정청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황이다.

시사점 :

- ①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경우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 등에 관한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함
- ② 해당 사례에서는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 청탁에 해당
- ③ 해당 사례의 어린이집 운영자 A는 제3자인 지방의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④ 지방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나,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려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지식마당

ISO 31000 (효과적인 Risk 관리를 위한 원칙)

1. ISO 31000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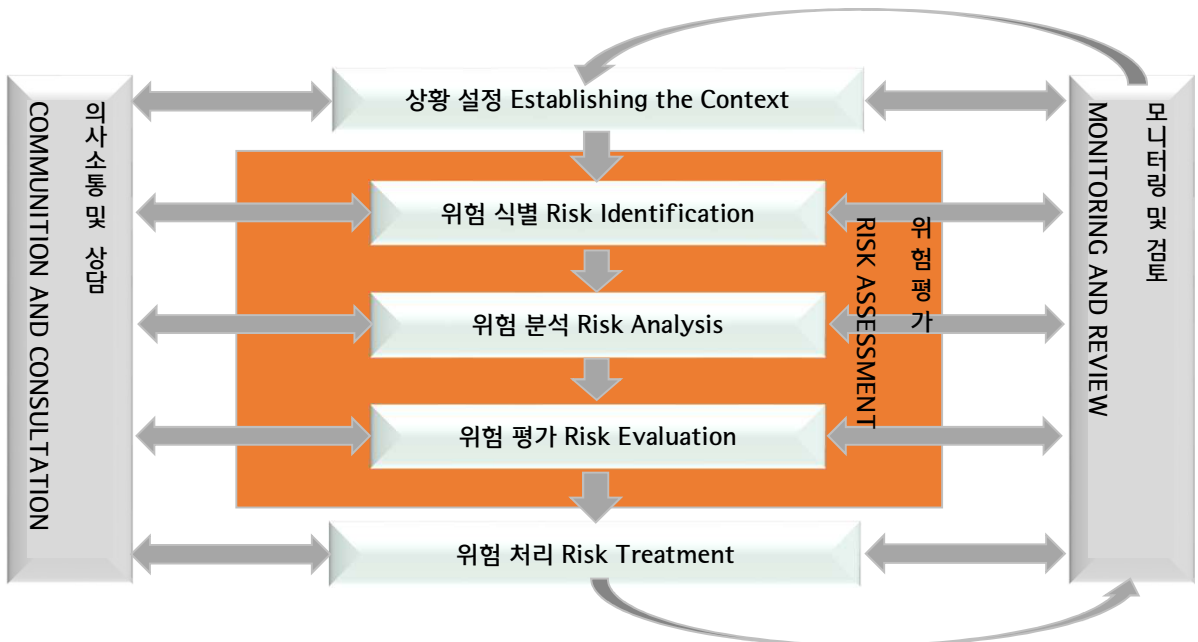
ISO 31000은 2009년도에 ISO 에서 효과적인 Risk 관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효과적인 Risk 관리를 위해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종류와 형태의 조직은 내 외부 요소와 영향에 직면하며 이러한 요소와 영향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점에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만드는 데, 이 불확실성의 효과는 조직의 목적으로서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의 모든 활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조직은 위험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위험의 평가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위험처리에 의해 위험을 변경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고 자문하며 위험을 감시하고 검토하며 향후 위험의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위험을 변경을 통해 관리한다. ISO 31000은 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모든 조직이 일정 수준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이 국제규격은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한다. 이 국제규격은 조직이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조직의 전반적인 통제, 전략, 기획, 관리, 보고 프로세스, 방침, 가치 및 문화에 통합되도록 위험관리체계를 개발, 이행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위험관리는 특정한 기능, 프로젝트 및 활동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모든 분야 및 계층에 항상 적용이 가능하다.

위험관리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요구에 만족하기 위해 여러분야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포괄적인 틀내에서 일관된 프로세스의 채택은 조직 전체에 대해 위험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국제규격에 서술된 일반적인 접근법은 특정상황이나 범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한다.



지식마당

2. ISO 31000 원칙과 기대효과

ISO 31000은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조직의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에 기여 (2) 전략 수립, 재무, 운영, 변경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조직의 모든 관리 프로세스와 통합 (3) 조직의 전략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선택 및 집중의 우선순위 정보를 제공 (4) Risk의 불명확성을 명확화 (5) Risk 관리의 효율성, 일관성, 신뢰성에 기여 (6) 이력 데이터, 경험,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관찰, 예측, 전문가 조언 등 활용 가능한 정보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수행 (7) 조직의 외부/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8) 조직의 목표 달성에 관련된 인원, 조직문화의 의지, 인식, 능력을 고려 (9) 조직의 모든 인원이 참여하고, 의사 소통 (10) 조직 외부/내부 상황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새로운 Risk의 출현, 기존 Risk의 소멸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 (11) 조직 전반의 Risk 관리 성숙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및 전략 적용을 실시하며 원칙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No	기대효과
1	목표달성 가능성 향상
2	적극적 관리를 촉진
3	조직 전반적 위험을 식별 및 처리 필요성 인식
4	기회와 위협 식별 향상
5	조직에 적절한 위험 관리 관행 적용
6	관련된 법규/규제 요구사항 및 국제 기준 준수
7	재무 보고 개선
8	이해관계자의 신임과 신뢰 향상
9	의사 결정과 기획의 신뢰할 만한 기반 수립
10	관리 향상
11	위험 처리를 위한 효과적 리소스 배분 및 활용
12	운영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

3. ISO 31000 주요 단계별 고려사항

3.1 설계

- 위험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전에 조직은 외부/내부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함
- 경영진은 조직 및 위험관리의 목표에 따라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경영진은 위험관리와 관련된 R&R을 정의하여야 함
- 경영진은 모든 조직의 활동들이 위험관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경영진은 적절한 자원을 할당 하여야 함
-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의를 수립하여야 함

3.2 실행

- 조직은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실행해야 함
- 시기 적절하게 적절한 전략을 통해 실행해야 함
-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위험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함
- 위험관리 프레임워크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해관련자와 소통하고 협의 해야 함

3.3 평가

- 조직은 위험관리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해야 함
- 위험관리 정책과 절차에 따라 위험관리 수행이 시기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 내부/외부상황이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 시기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 위험관리가 조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지

기업의 리스크관리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2011 한국 표준협회

Quiz

1. 다음 중 ISO 31000의 위험관리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다양한 조직, 분야, 계층에 적용이 가능하다
 - ② 포괄적인 틀 내에서 일관된 프로세스의 사용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③ 특정한 상황이나 범위에는 적합하지 않다
 - ④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요구에 만족하기 위해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개발 되었다

2. 다음 중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ISO 31000이 요구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 ① 조직의 모든 관리 프로세스와 통합
 - ② 정보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수행
 - ③ 원활한 의사소통
 - ④ 재무보고개선

3. 다음 중 ISO 31000의 위험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위험 식별
 - ② 위험 분석
 - ③ 위험 평가
 - ④ 위험 처리

4. 다음 중 부정청탁금지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 ① 개인적인 특혜를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 거래관행
 - ②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③ 계약 당사자 선정 직무에 관한 국가계약법 위반
 - ④ 보조금·장려금의 배정직무에 관한 보조금법령 위반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② 적발책임은 ISO 26000:2010에서 정의한 사회적 책임 7원칙에 포함되지 않음
2. 답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답 ③ KSA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모든 조직이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짐
4. 답 ④ 기부금 운용은 신세계의 희망배달 캠페인의 특징이 아님

관련 행사

1. 농어촌公, 우수감사 기획재정위원장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은 '2017 미래감사포럼 우수감사사례 공모전'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공사 감사실은 부정위험 진단 및 감사대상 발굴·대응 매뉴얼 마련, 일상감사 강화 통한 방만 경영 예방 및 비리 개연성 차단,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신규 사업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국민 불편 사전 방지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4대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html?no=16673>

2. 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강화 위한 은행권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담당부서장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은행권 건전성 및 준법성 검사 운영 방향과 중점 검사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은행의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취약사례를 소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을 당부했다.

최근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해 재산상 이익제공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과 함께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약관 제 개정 관련 절차 준수 철저, 업무보고서 정확성 제고 등 은행의 업무상 개선 필요사항 등도 안내했다. 최근 은행의 영업점 및 인원 감축 과정에서 내부통제 약화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라는 뜻도 전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당국과 은행 간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준법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5935>

3. 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내부통제체계 확립 세미나 개최

최근 상장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상장기업 불공정거래 예방 및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했다.

한국거래소는 세미나에서 내부자거래 관련 여러 사례를 분석하고 상장기업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3805242>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